신뢰받는 지역은행
(생계형예금 특별우대)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신입생 2008.12.1~2009.1.7
편입생 2008.12.1~2009.1.14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제1824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2월 22일 (음력 11월 25일) 월요일

사랑의 몰래산타 1004 사랑의 몰래산타 광주본부는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에서 1천4명의 산타가 모인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21일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단체나 구청 등을 통해 추천받은 저소득층 자녀·소년소녀 가장·다문화가정 및 장애 어린이 등 300여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전달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5+2' 호남 빼고 강행

광주시·전남도 "지역 여론 무시·고립화" 강력 반발

시·도민들 "모든 수단 강구해야"

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전면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해 정부가 호남권을 배제한 채 21일 확정 발표하자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지식경제부는 이날 '5+2 광역경제권' 가운데 '호남권'(광주시, 전남도, 전북도)을 제외한 6개 권역의 선도산업을 확정·발표했다.

지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식정보산업을 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 및 뉴(New) IT를, 동남권은 수송 기계와 융합부품소재를, 대경권은 IT융복합과 그린에너지, 강원권은 의료융합과 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을 각각 맡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 선도산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호남권'은 추후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조속히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5+2 광역경제권'의 권역 재조정을 요구하며 선도산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해 온 광주시·전남도 등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호남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6개 시·도지사회의를 비롯,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역경제권 재조정을 건의하는 등 변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컸던 만큼 이번 정부의 일방적인 확정 발표에 대한 지역민들의 상실감은 한층 큰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상실감을 넘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시·도민들은 박 시장과 박 지사가 22일로 예정된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최종 입장을 기다려 보자는 의견을 보이면서도 "강력한 항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그동안 "호남에 1개 권역(호남권)을 두고 영남에 2개 권역(대경권, 동남권)을 두는 것은 영·호남간 산업격차와 소외를 가중시킨다"며 호남권에서 전북을 떼어내 새로운 권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호남권을 제외한 타 지역만의 핵심선도산업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호남 고립화'에 나선 것으로 '5+2 광역경제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2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불러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확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이번 발표에 대해 광주시 역시 권역 재조정이 없는 한 선도산업 불참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확실히 밝혀 둔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일시에 무너뜨린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발표"라며 "3개 시·도가 조속히 만나 지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종·윤영기기자 chae@

'한파 정국' 풀릴까

한나라 "25일까지 최대한 대화 모색"

민주당 "대통령 사과 전엔 대화 없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상정으로 형성된 여야 대치전선이 본격적인 '입법전쟁'으로 비화할 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지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특히 그동안 '속도전'을 내걸고 중점법안 처리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던 한나라당이 21일 "야당과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유화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한파 정국'을 녹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5일 성탄절까지 각급 채널을 통해 야당과 최대한 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향 선회는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단독 상정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의식, 힘의 대결보다는 일단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입법 투쟁의 대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대여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 여당의 대화 제안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면전, 속도전을 요구하며 총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다"면서 "이 전쟁을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전쟁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런 대치상황 속에서 자유선진당은 '필수불가결한 안건부터 처리하자'며 국회 정상화 해법을 내놓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고속철 오송~광주

전 구간 내년 9월 착공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이 내년 9월 착공된다. 또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복선화공사가 진행중인 전라선에는 사업 조기 완공을 통해 오는 2011년 상반기 중 KTX가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철도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철도예산을 올해보다 19.7% 늘어난 6조4천439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전체 철도예산 가운데 철도 건설 예산은 4조5천874억 원으로, 올해보다 36.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에 철도 예산의 65% 이상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1천400억 원을 들여 내년 6월 오송~익산 구간을 착공하고 9월부터는 오송~광주 전 구간을 착공해 최대한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또 2010년 완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2단계 사업에는 4천68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으로 추진중인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도 내년에 1천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사업 조기완공을 통해 2011년 상반기에는 KTX를 투입할 계획이다.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사업에는 2천억원이 투입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기업 1만9천명 감원

전체 정원의 13% … 자산 8조원 매각

한국전력과 철도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이 향후 3~4년에 걸쳐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를 감축해 모두 1만9천 명을 줄인다. 〈관련기사 5면〉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대상으로 퇴출제도가 운영된다.

정부는 21일 이런 69개 기관의 경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천500 명을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천900 명을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천 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69곳에서 전체 정원 15만 명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만9천 명에 대한 감축작업에 들어가면서 노조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감축은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감축폭은 철도공사가 5천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천420명(11.1%), 수력원자력 1천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었다.

한전은 9개 자회사를 합한 감축 인원이 6천 명에 달했다. 감축률로는 코레일유통(37.5%), 관광공사(28.9%), 방송광고공사(20.2%) 등 6곳이 20%를 웃돌았다.

정부는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에 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공공기관들이 감원폭을 줄이기 위해 이미 채용을 꺼리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채용시장에는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감원으로 절감한 예산은 내년에 인턴 1만명을 활용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쓰인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인건비 감축분을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쓸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7조6천억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개 상록회관과 노후임대주택(2천억 원), 마사회 경주경마장 예정지(160억 원), 가스공사 직원사택(362억 원) 등 자산 65건에 8조5천억 원 어치를 팔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230여 개 출자회사 지분의 매각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알 림

제32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6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김찬종 교수 '저신장·성조숙증 진단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6일(금) '제32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저신장과 성조숙증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김찬종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키가 작은 아이들의 성장지연 원인과 최근 늘고 있는 성조숙증의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한다.

강좌 내용은 오는 30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주 제 : 저신장과 성조숙증의 진단과 치료
■강 사 : 김찬종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 대한소아신장학회 간행위원
-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간행위원
- 미국내분비학회 최우수 연제상
- 전남의대 소아과학교실 부교수

■일 시 : 26일(금)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